

# KMI 동향분석

**VOL.87**  
2018 JUNE

발간년월 2018년 6월(통권 제87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최재선 해양수산 지역발전 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jschoi@kmi.re.kr/051-797-4922)

최지연 해양수산 지역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jychoi@kmi.re.kr/051-797-4713)

섬은 해양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공간이고, 해양생태·해양관광 등 해양을 이용하는 거점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섬은 육지와 고립되어 있어 생태적 가치가 크고, 다양한 역사, 문화적 스토리를 갖고 있어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크다.

무인도서와 유인도서를 합쳐 모두 3,300개가 넘는 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독도 문제와 영해기점 도서 관리 문제 등 섬에 대한 많은 현안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섬을 찾는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섬에서 생활하는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고, 유인도서의 인구과소화·무인화가 진행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 영토적 관리 차원은 물론 섬 주민의 정주 안정성 증진, 체계적인 섬 개발 추진, 섬의 가치 증진, 섬과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섬에 대한 정책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섬에 관한 정책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해 섬에 대한 조사와 연구 및 섬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정책개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해양영토 관점에서 도서 위치·지형 등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섬 담당 부처에 업무가 각각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 집행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무인도서 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는 「도서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유인도서 업무를 시행 중이며, 환경부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등 섬에 대한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어 섬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은 정책개발 및 지원조직으로 각각 서로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두고 있어 섬 관련 정책연구 기능도 여러 연구기관에

---

분산되어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3년 국가해양국 산하에 해도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섬 개발과 보호 등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정부의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연안재해 예방, 섬 문화 연구 및 홍보, 국제 협력 촉진 등을 수행하는 섬에 관한 종합연구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늘어나는 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요의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섬 문제 전담 연구기관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형태로 설립하되, 섬 관련 부처 간 공조를 통해 기존 유관 연구기관의 섬 관련 연구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섬, 다양하고 중요한 가치와 기능 보유

### ■ 우리나라의 섬은 무인도서 2,876개, 유인도서 472개

-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르면, 섬(island)은 물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시(high tide)에도 수면 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인 곳으로 정의됨
- 무인도서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시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정의됨<sup>1)</sup>
- 도서는 만조시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정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로 연결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섬은 제외하고 있음<sup>2)</sup>
- 도서통계는 해양수산부(무인도서)와 행정안전부(유인도서)로 나누어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관리 차원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섬 통계를 발표함

표 1. 우리나라 섬 분포 현황

구분	무인도서		유인도서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도서수	2,876개	3,191개	472개	486개
면적	76.5km <sup>2</sup>	68.7km <sup>2</sup>	3,777.5km <sup>2</sup>	3,478.7km <sup>2</sup>

자료: 해양수산부, 2010,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10-2019), p. 7, 행정자치부 전국 유인도서 통계(2015. 12. 31.), 국토교통부, 2016년 지적통계 연부

### ■ 섬은 해양권익의 보호와 해양 이용·개발 거점 공간

-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는 해양관할권 확보에 관한 법적 지위를 가짐. 우리나라 영해기점 23개소 중 20개소가 섬이고, 이 중 7개는 유인도서, 13개소는 무인도서에 해당함
- 우리나라 도서의 해안선 길이는 7,210.3km로, 이 중 자연해안선의 비율은 84.7%를 차지하며,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2개소 중 11개소는 섬과 주변해역으로 해양생태계가 우수하고,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함<sup>3)</sup>

1)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무인도서법)」 제2조.

2)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3)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 공표자료(2014. 12)에 따르면 전 해안선 길이는 14,962.8km로 육지부 해안선은 51.8%, 도서부 해안선은 48.6%를 차지함. 자연해안선의 경우 육지부가 48.6%인 것에 비해 도서부는 84.7%로 나타나 자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서와 주변해역에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의 경우, 유인도서 6개소(대 이작도, 가거도, 나무섬, 청산도, 울릉도, 추자도), 무인도서 5개소(문섬, 오록도, 소화도, 남형제섬, 토끼섬) 해당

- 최근 해양관광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도서관광에 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면서 지난 10년간 (2007~2016년)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일반인이 30% 증가하였고, 2016년 기준 연안여객선 이용객 1,542만 명 중 일반인이 76%를 차지하였음<sup>4)</sup>
-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서관광개발계획·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충남도는 ‘찾아가고 싶은 섬’과 ‘명품섬 베스트 10’, 전남도는 ‘가고 싶은 섬가꾸기 사업’, 경남도는 ‘테마가 있는 관광 섬 개발’, 인천시는 ‘애인(愛仁) 섬 만들기’ 사업 등이 있음

## ■ 유인도서의 과소화·무인화로 관리 사각지대 증가

- 전남 신안군의 인구는 1985년 11만4615명에서 2015년에 4만4378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전남 유인도서의 39개소가 50년 후에 무인도서로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sup>5)</sup>
- 유인도가 과소화·무인화 됨에 따라 상시적으로 이용했던 해역이 점차 빈 공간으로 변화해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해역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됨

표 2. 신안군 섬 인구 분포 현황

구분	1985년(명)	2015년(명)	85년 대비 15년 인구감소율(%)
신안군	114,615	44,378	-61.3
지도읍	11,977	5,054	-57.8
압해읍	12,597	6,857	-45.6
증도면	5,434	2,091	-61.5
임자면	7,485	3,651	-51.2
자은면	7,123	2,460	-65.5
비금면	10,154	4,011	-60.5
도초면	10,029	3,087	-69.2
흑산면	10,480	4,497	-57.1
하의면	6,428	2,019	-68.6
신의면	4,601	1,864	-59.5
장산면	7,251	1,823	-74.9
안좌면	9,731	3,483	-64.2
팔금면	4,269	1,191	-72.1
암태면	7,056	2,290	-67.5

자료: 신안군 내부자료

4) 한국해운조합, 연안여객선업체 현황, 2017

5) 이제연 외, 2016, 섬의 인구변화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섬의 종합 활용·관리체계 부재가 문제

### ■ 섬 조사사업 분산 및 주변해역의 통계·정보공유 미약

- 도서의 위치가 해양지정학적으로 중요하나 도서의 위치, 해안선·지형, 생태계, 소유체계, 토지이용 등에 대해 개별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조사 시기·방법·내용 등이 각기 달라 도서 자료·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음
- 특히 영해기점 무인도서는 「무인도서법」에 따라 정기적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이 마련되고 있으나, 영해기점 유인도서에 관한 정기적 조사 등에 관한 근거 법령 등은 부재함
- 영해기점 도서의 경우 해양수산부, 외교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립해양조사원 등 다양한 부처가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 협조체계가 미흡함

표 3. 섬 조사체계 현황

구분	주요내용	시기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실태조사, 영해기점무인도서 조사	10년 정기조사
국립해양조사원	해안선 조사, 해저지형 등 해양지구물리조사 등	부정기·수시조사
환경부	전국 자연환경 조사	5년 정기조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내 섬 수중생태계 조사 등	부정기·수시조사

자료: 필자 작성

### ■ 섬의 관리·활용정책 개발 등을 위한 전담기관 부재

- 최근 도서관광개발의 적극적 추진 등으로 도서 매매증가, 섬의 난개발, 도서의 자연·문화자산의 훼손, 섬의 물·전기 공급시설과 접안시설 노후화, 섬주민의 교육·의료서비스 부족 등 섬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하지만 섬의 가치 증진, 섬개발의 체계적 추진, 섬주민의 정주안정성 증진, 섬과 주변해역의 생태계 보전 등을 종합 연구하여 현실적 관리·대응정책을 개발·적용하기 위한 기관이 없는 실정임
- 특히 최근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유인도서와 접경해역에 위치한 도서는 단순히 정주기반을 강화하는 대안과 함께 해양 영토적 관리 차원의 정책대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부재함

표 4. 우리나라 섬 관리체계

부처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대상도서	무인도서 (영해기점 무인도서 포함)	유인도서 중 개발대상도서
관련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서개발촉진법
주요 관리수단	4개 관리유형(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과 무인도서 실태조사 등	개발대상도서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주거환경시설, 교통시설 등 개선사업 등
개별법	행정안전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환경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특정도서)
	해양수산부	해운법(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 항만법(국가관리연안항),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교육부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자료: 최지연 외, 2017, 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활용방안 연구, 196면.

## 중국은 2013년에 해도연구센터 설립

### ■ 해양굴기정책을 추진하면서 섬에 대한 제도정비 강화

- 중국은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해양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섬에 대한 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대표적으로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추진함
- 중국은 2010년에 우리나라 도서 관리법의 내용과 시행 체제를 벤치마킹한 해도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섬 관리에 나서고 있음
- 이 법률은 도서와 도서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보호, 도서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해양 권익의 수호,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규정함<sup>6)</sup>
- 이 법률에 따라 중국의 국가해양국은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시행하게 되는 중국 전국 해도보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

6) 최지연 외, 2017, 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7면.

## ■ 국가해양국 소속으로 해도(섬)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 특히 중국은 섬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6년에 도서 통계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 조사사업을 통해 확보한 섬에 관한 인문학적, 지리학적, 생태학적 정보를 텐진에 있는 중국해양정보센터에 입력해 관리 중임
- 중국의 섬 관리정책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항은 국가 차원에서 섬을 전담하여 연구하는 공공기관을 설치, 운영한다는 점임
- 중국이 해도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된 것은 2011년 국가해양국 리우츠꾸이(刘赐贵) 전 국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구체화한 것임
- 당시 리우츠꾸이 국장은 중국 동남부 연안지역의 푸젠 성에 있는 핑탄 종합실험단지의 발전을 촉진 하는 대안의 하나로, 해도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중국 정부의 섬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는 해법을 제시한 것임

표 5. 중국 해도연구센터 설립 일지

일시	주요 추진 내용
2011. 6. 14	- 국가 해양국 리우츠꾸이(刘赐贵) 전 국장 센터 설립 제안
2012. 10. 26	- 국가 해양국과 푸톈성 인민정부, 센터 설립 협정서 체결
2013. 1. 4	- 국가 해양국, 센터 기능 및 조직, 인력 등 세부방침 승인
2013. 1. 5	- 해도연구센터 제1기 소장으로 차이펑(蔡锋) 박사를 임명
2014. 1. 7	- 핑탄 섬의 센터 1기 공사 준공 및 센터 정식활동에 착수

자료 : 중국 해도연구센터

## ■ ‘국제 섬 포럼’ 개최 등 섬 종합 연구기관으로 발전

- 해도연구센터는 섬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국가해양국의 산하 조직으로, 원장 아래에 행정부서와 연구 부서를 두고 있음
- 섬 개발과 보호 등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정부의 입법 지원, 연안재해 예방, 섬 문화 연구, 홍보 등에 50명의 연구진을 확보함

그림 1. 중국 해도연구센터 조직도



자료 : 중국 해도연구센터

- 중국은 평탄 섬을 해도연구센터 중심으로 하여 섬 생태복원실험실, 섬 과학 박물관 등 설치, 섬을 연구하는 국제 허브로 만들 계획임
- 한편, 해도연구센터는 2017년에 국제 섬 포럼, 태평양 소도서국가 해양부문 라운드 테이블 개최 등 국제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섬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방법

### ■ 우리나라의 섬 관련 정부 부처는 3원화가 된 상태

- 우리나라의 경우 섬에 관한 업무는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환경부 등에 각각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
- 해양수산부는 도서관리법 등을 토대로 무인도서 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는 도서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유인도서 업무를 시행 중임
- 이에 비해 환경부는 독도 등 특정도서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입각, 환경적인 측면에서 섬 생태계 보호 업무를 다루고 있음
- 해양수산부 등은 섬 관련 정책 등을 개발하거나 지원하는 조직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두고 있어 섬 관련 정책연구 기능도 여러 연구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임(〈표 6〉 참조)<sup>7)</sup>

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발의·출연하여 설립하였음



표 6. 우리나라 섬 관련 법률 및 관할 부처

관련 부처	관련 법률	관련 연구 기관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행정안전부	도서개발촉진법(유인도서 관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환경부	독도 등 특정도서지역의 생태계보호에 관한 특별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공동 설립이 바람직

- 이에 따라 섬에 관한 종합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간의 정책 공조를 통한 공동설립이 합리적임
- 또한 섬 전담 연구기관의 설립은 유관 연구기관의 섬 관련 연구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이전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되, 기존의 특정 연구기관의 부설 연구소 형태나 또는 완전히 별도로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 우리나라 섬 관련 단체·전문가 네트워크 추진

- 새로 만들어지는 섬 전담 연구기관은 중국의 해도연구센터와 같이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속가능한 섬 개발 및 관리를 통해 연안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부문 혁신성장 전략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함
- 또한, 기존의 섬 관련 국내외 단체와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개방형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해야 함
- 이와 함께, 일본의 이도센터, 중국의 해도연구센터, 유럽의 작은 도서 연합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국제 섬 포럼 개최 등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 될 것임

##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듦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 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 ,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노동법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URL: <http://www.kmi.re.kr/>